

여당에서 조기 개각 불가피론...“총리 포함” 이야기도

“野 정치공세” 방어하던 지도부 여론악화에 책임론 공개 거론 “세월호 때처럼 민심 이반 우려”

‘이태원 압사 참사’의 112 신고 녹취록 공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회의에서 “왜 충분한 현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어 “추모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추궁,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 내부적으로 야권의 책임론 공세 등과 관련 ‘대응 자제령’까지 내렸던 지도부의 이같은 공개 언급에 사실상의 경질 요구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경질은 물론이고, 이른 시일 내 상당 폭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은 본인들의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결정이) 빨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조해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대응

의 문제점에 실체가 어느 정도 규명이 되고, 주무장관으로서의 책임이 드러나면 그때는 인사 조치까지 대통령실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인재’의 책임을 조기에 정리하지 못하면 세월호 때처럼 급격한 민심 이반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연말·연초 개각 가능성과 맞물려 그 대상이 총리까지도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아직 이런 논의를 표면화하기보다는 수습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애도 기간이 끝나면 당내 특별위원회를 꾸려 진상 규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여야 정치권과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초당적 조사특위를 꾸리자고도 제안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도 선제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이다.

이날 당내에서는 주최자 없는 행사의 관리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의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랐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태원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입법의 미비는 저를 비롯한 정치권이 크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그 어디에도 미루지 않았다”면서 “우선 사고의 원인과 조동 대처 미흡부터 조사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 경찰 조치 미흡시 국가 배상책임 인정”

민주 임오경 의원 판례 확보 ‘조치 가능’ 규정, 의무로 해석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경찰 대응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과거 경찰관 안전상의 우려에도 조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확보한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98년 5월 정모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판 바 있다.

이 사건은 1993년 12월 24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농민 시위를 저지하던 경찰이 열쇠를 빼앗은 트랙터를 시위 종료 후 도로에 그대로 방치했다가 발생했다. 이튿날 새벽 정씨 등은 차량을 이용해 해당 도로를 주행하다가 어둠 속에 방치된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피하려다가 길을 이탈해 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트랙터를 도로에 방치한 경찰관의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해당 조항은 경찰관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우려가 있는 경우로는 천재, 인공 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등과 함께 ‘극도의 혼잡’도 나열하고 있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해 형식상 경찰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처럼 돼 있으나, 취지와 목적에 비춰 경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 직후 정부는 ‘경찰에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고 선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 판단에는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전날 공개된 ‘112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참사가 발생하기 약 4시간 전부터 신고가 잇따르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구체화하고 있었음에도 경찰의 대응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상 의무’만 제대로 이행했어도 막을 수 있던 사회적 참사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누군가는 책임”...윤희근·이상민 경질 등 검토

여론 흐름 따라 책임론 확산 여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실도 문책성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선(先) 수습’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윤희근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경질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경찰이 지난달 29일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참사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고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12 신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156명 사망이 오듯이 정부 책임인 것으로 됐다”며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이런 기류를 전하면서도 “이번 사고의 경우 파악,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경질로 이어질지 다른 어떤 선택이 나올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당장은 경찰 수뇌부 문책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정무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여론 흐름에 따라 책임론의 범위가 더 넓어질 여지도 있어 보인다.

한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행사의 직접적인 책임자는 용산구”라며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부 112 신고 대응체계 혁신...다중 인파사고 TF도 운영

주최자 없는 행사 안전 방안 마련

정부는 2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112 신고 대응체계 혁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최자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태스크포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 발생 당일, 사고 약 4시간 전부터 사

태의 위험성을 알리는 다급한 112 신고 전화가 11건 접수됐는데도 제때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또다시 정부가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뒷북 대책’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관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 인파사고 안전확보 TF를 오늘부터 운영해 주최자 없이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또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112 대응체계의 혁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hotonic KOREA photonicokorea.org

대한어머님들의 기쁨의 도시 광주

한국광산업진흥회 주관 제20회 국제 융합 산업전시회 및 컨퍼런스

International Photonics Convergence Industry Exhibition and Conference

여러분을 모십니다.

2022. 11. 23(수) ~ 24(목) 2일간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장 A, B홀

- 광융합산업 유망기술·우수제품 전시회
- 제12회 광의료헬스 심포지움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MEMS기반 산업 기술교류회
- PLC·라이다 기술교류 세미나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채용 박람회

전시회 Point

- 광융합산업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로드쇼로 다수해택과 실질적인 국내외 바이어에게 홍보기회 제공
- 해외 바이어 초청 지원 : 항공료 차등지원, 숙박 2박 100%
- 항공료지원 (최대 200만원, 계약체결시 80%, 협약체결시 70%, 현장방문 50% 지원)
- 해외바이어 20개국 100여명 초청 상담 매칭 및 통역지원
- 진흥회 해외마케팅센터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용 신규 해외 판로개척 기회 제공
- B2B 온라인 홍보로 기업 마케팅 지원

주최 광주광역시 광안구

주관 KPIPI 한국광산업진흥회

문의 한국광산업진흥회 TEL 062-605-9653~4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